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2026년 3~4월 보도자료(<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

I

입양절차 개선해 편의성 높이고 아이와 가족을 안정적으로 연결한다

- 입양신청 '등기우편' 대신 '온라인'으로 전면 개편...실시간 진행상황 조회 가능 -
- 입양 기본교육 확대, 조사 인력 확충 및 위원회 운영 확대로 원활한 운영 지원 -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비 양부모의 편의를 높이고 입양절차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입양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선방안은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이 보다 편리하게 절차에 참여하고, 절차 진행 과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입양 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지연을 줄여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먼저, 4월부터 현재 등기우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입양신청 절차를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개선하여 예비 양부모의 신청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 또한, 입양 절차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청 이후 진행 과정에 대한 예비 양부모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 아울러, 입양 기본교육을 한시적으로 매월 2회에서 매주 1회로 확대하여 예비양부모가 기본교육 과정을 수강하기 위해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할 계획이며, 교육 장소를 지방으로 확대하여 지방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도 높일 방침이다.
- 예비양부모 자격 심의 및 결연 심의 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내입양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예비양부모의 적격성을 확인하는 가정환경조사 단계도 조사방법 효율화, 인력조정 등을 통해 절차 운영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 향후 입양신청 추이와 제도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력과 교육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단계적 추가 확충을 검토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과 교육 운영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법원 등 관계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구축하여 입양절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 “입양은 아동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절차의 체계적인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절차 운영 과정에서의 병목을 완화하고, 예비양부모의 신청 편의성을 높여 공적입양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입양절차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참고 **국내입양절차 주요 개선사항**

- ◇ (문제점) 제도 개편에 따른 초기 예비양부모 신청이 집중된 가운데, 순차적 절차 운영과 교육·조사 수행여건 제약으로 일부 속도가 더딘 상황
- ⇒ (개선) ① 현 시점에서의 주요 병목발생 요인(예비양부모 교육, 가정조사) 해소 ② 각 입양절차를 점검하여 필수적 절차는 충실히 수행하면서 행정절차는 합리적으로 개선
- ⇒ (기대효과) 예비양부모의 편의성 제고 및 입양절차의 안정적 운영 추진

< 국내입양절차 개선안 >

구분	절차명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1단계	입양신청	신청방식 개선	등기	온라인
2단계	범죄경력조회	-	-	-
3단계	기본교육	교육운영 확대	월2회	월4회
4단계	가정환경조사	조사인력 확충	13명	단계적 확충 추진
5단계	자격심의	분과위원회 운영확대	월1회	월2회
6단계	결연심의	분과위원회 운영확대	월1회	월2회
7단계	결연통보 및 수용의사 확인	처리기간 규정	처리기간 부재	처리기간 규정
8단계	아동첫만남 및 결연확인서 발급	확인서 발급시기 개선	아동 첫만남 이후	아동 첫만남 이전
9단계	임시양육결정 및 법원허가	임시양육결정기간 단축 협의 등	임시양육결정 4개월	실무협의체계구축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3920. 입양정책팀. 2026. 3. 19.

II

다시 만나는 대한민국-몽골, 보건의료 협력의 새로운 미래 함께 열다

- 코로나19로 중단된 한-몽 보건의료협약체 재개 -
- 한-몽골 보건부 간 국비환자 송출 및 의료인 연수 약정 체결 -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메디컬코리아 2026」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몽골 친부렝 직씨드수렝(Chinburen Jigjidsuren) 보건부 장관과 3월 20일(금) 롯데호텔(서울시 중구)에서 양자 면담을 개최하였다.

■ 몽골은 2011년 3월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보건의료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 국가로 한국 의료 기관의 몽골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4년 기준 몽골 환자 2.6만 명이 치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 시엘병원, 서울하정외과의원, 현대병원, 청담오라클피부과 성형외과의원, 서울의과학연구소 SCL의원, 한국의학연구소(KMI) 총 6개 기관

**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 중 몽골은 25,731명('24년) 유치실적 7위

① 일본(44만 명) ② 중국(26만 명) ③ 미국(10만 명) ④ 대만(8.4만 명) ⑤ 태국(3.8만 명) ⑥ 싱가포르(2.7만 명) ⑦ 몽골(2.6만 명)

■ 이번 면담은 양국 보건의료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한-몽 보건의료협약체 재개, ▲몽골 국비환자 진료, ▲의료인 연수, ▲암관리 협력, ▲제약-의료기기 분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몽골 ICT 환경 고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 면담에 이어 양국은 몽골 내 국비 환자의 송출과 의료인 연수 분야 협력을 위한 ① 몽골 국비환자 송출 및 의료인연수 협력 약정(양국 보건부 간), ② 몽골 국비환자 의료서비스 제공 계약(한국보건산업진흥원-몽골보건개발센터-24개 의료기관 간), ③ 몽골 의료인 연수 시행계획서(한국보건산업진흥원-몽골보건개발센터 간) 3건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 먼저 한-몽 양국 보건부 장관이 체결한 국비환자 송출* 및 의료인 임상 연수 협력 약정은 그간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국비환자와 의료인 연수 협력이 몽골까지 확대되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몽골 보건부는 자국 내 진료가 어려운 25개 질환을 대상으로 해외진료시 진료비의 일부를 국비로 사후 지원하는 국비환자 해외치료 프로그램 운영

- 다음으로 한국의 우수한 24개 의료기관과 몽골 보건개발센터(CHD),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자간 국비환자 의료서비스 제공 계약(PA, Provider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몽골 중증질환 환자들이 한국을 방문 전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사전에 선택하고 입국 후에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끝으로 이번에 보건개발센터(CHD)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간에 체결한 몽골 의료인 연수 시행계획서는 몽골 측 수요를 반영하고 일부 비용을 몽골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연수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료인 연수 협력과 관련해서는 그간 한국과 몽골은 한-몽 서울프로젝트('12~'19)를 통해 173명의 의료인 연수(단기참관, 무상)를 실시하여 한국 의료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쌓아 온 바 있다.
- 동 시행계획서를 통해 올해 7월 국내 의료기관에서 1개월간 다학제 진료중심 팀연수가 진행 될 예정이다. 이는 암 분야, 심장이식 등 몽골 내 수요가 높은 진료 분야의 의료인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친부령 직피드수령 몽골 보건부 장관은 “국비환자 송출과 의료인 연수는 보건의료 분야의 중요한 협력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과거 본인이 한국 의료기관 연수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 한국의 선진 의료 기술을 전수 받는다면 몽골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인력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 정은경 장관은 “이번 메디컬코리아 행사 참석과 양자 면담을 통해 한국과 몽골의 협력이 재개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몽 보건의료협의를 조속히 개최하여 몽골 국비환자 송출 및 의료인 연수 협력 외에도 암 관리, 제약·의료기기, ICT 의료환경 고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구체화되고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며, “2026년 다시 만난 한국과 몽골은 보건의료 협력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하게 되었다”라고 이번 몽골 장관과의 만남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기대감을 표했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3923. 보건산업해외진출과. 2026. 3. 20.

Ⅲ

아동수당 지원 대상과 금액 확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 개정 내용 공포일부터 시행, 준비기간 거쳐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 -
- 월 최대 13만 원 지원, '30년까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 13세로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20(금)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 중이나,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 아동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매월 2만 원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에 따른 구체적인 추가 지급액은 시행령 및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27. 공포 예정).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1만 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 주요 개정 내용 〉

〈현행〉	〈개정〉
대상자	대상자
8세 미만	13세 미만(연 1세씩 단계적 확대) * ('26) 9세 → ('27) 10세 → ('28) 11세 → ('29) 12세 → ('30) 13세 미만
지급금액	지급금액
매월 10만 원	수도권 : 매월 10만 원 비수도권 : 매월 10.5만 원 인구감소지역 ^{우대} : 매월 11만 원(상품권 12만 원) 인구감소지역 ^{특별} : 매월 12 만원(상품권 13만 원)

- 개정 내용은 법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준비기간 등을 거쳐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지급대상 확대 및 지역에 따른 추가지원은 2026년 1월부터 소급하여 지급되며,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 아동의 경우, 법 공포일 이후 가장 최근의 아동수당 지급 정보를 바탕으로 보호자-아동명, 계좌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해당 문자 수신 후, 지급 정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문자 발신 번호(044-865-0346)로 '1'을 회신하고, 보호자-계좌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신청하면 직권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해당 안내 문자 메시지는 접속 링크를 포함하지 않으며, 앱 설치 등을 유도하지 않으므로 링크 접속이나 앱 설치를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는 주의가 필요하다.

-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아동수당법」 개정은 2018년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이 도입된 이래 대상 연령을 가장 큰 폭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처음으로 상향되는 등 아동에 대한 양육 지원을 강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확대된 아동수당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해 주시되, 피싱 문자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3928. 아동정책과. 2026. 3. 20.

IV

‘기본사회’ 전환 시동... 소득·돌봄·의료 3개 핵심 분야 추진

- 보건복지부 장관을 단장으로 보건복지 기본사회기획단 출범(3.26.) -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소득·돌봄·의료 3개 핵심 영역에서 기본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3월 26일(목) 「보건복지 기본사회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 최근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생산 현장에 투입되면서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재편이 예고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소득 양극화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기본이 튼튼한 나라’라는 국정목표를 실현하고 국정과제인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구체화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기본사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선제적으로 소득·돌봄·의료 분야의 기본사회 전환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기획단을 설치하였다. 기획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단장, 제1차관·제2차관을 부단장으로 총괄·소득반, 기본돌봄반, 기본의료반으로 구성된다.
- 특히 총괄·소득반에는 ‘기본소득기획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한계 및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기본소득, 참여소득 등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도입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 연구유역·기본사회위원회 협업 전문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시범 적용 가능한 모형을 설계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국민을 포함한 폭넓은 공론화 작업을 거쳐 시범사업을 포함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도출한다.
- 기획단은 앞으로 소득·돌봄·의료 분야별 기본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 추진 중인 정책·사업들을 기본사회 추진 방향에 맞춰 점검·재구조화하고 장·단기 추진목표, 추진과제 등을 수립·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정은경 장관은 “시로 대표되는 거대한 사회 변화에 맞춰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다”라며,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는 보건복지부가 앞장서서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3946. 복지정책과. 2026. 3. 26.

V

국민이 원하는 구강서비스로...5년 뒤 달라지는 구강 정책 만든다

- 제3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첫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자문위원 위촉, 정책연구 추진방향 논의 -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21일(화) 오후 3시 서울 비즈센터에서 「구강보건법」 제5조에 따라 향후 5년간의 국가 구강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7~2031)」 수립을 위해 첫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정책의 전문적 깊이를 더하기 위해 구강보건 전문가, 정책 현장 실무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은 초고령사회 진입, 통합돌봄 시행 및 치과 의료현장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등 급변하는 보건 의료 환경에 대응하여 향후 5년간의 실효성 있는 핵심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세부 실행전략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 이번 자문회의는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방향을 공유하며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와 함께 강원대학교 강릉산학협력단(책임연구자: 정세환 교수)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을 도출할 예정이다.
- 특히, 이번 3차 계획은 수립 과정에서부터 소통과 투명성을 우선으로 두고 국민 참여형 공론화 과정을 병행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구강 정책 요구도를 파악·분석하고,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구강보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 3차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4058. 구강정책과. 2026. 4. 21.